

# 5·18 왜곡 처벌법 법안소위 통과... '무릎사과' 국민의힘 반대

당론 추진 민주당 단독 의결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등  
7년 징역·7000만원 벌금 내용  
여야 갈등에 5월 법안 처리 지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 역사왜곡처벌법-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이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최대 쟁점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5·18 역사왜곡 처벌법 처리에도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내면서 논란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를 찾아 '무릎사과'를 하고, 호남에 제2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정한 국민의힘이 사사건건 광주·전남의 현안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어 '5월 법안' 처리 과정이 이들의 '저정쟁'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시험대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날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5·18법도 의결하지 않고 논의만 하겠다더니 약속을 순바닥 뒤집듯 뒤집어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공수처법을 바로 의결하려고 의사를 치러 하기 직전에 저희가 안전조정부 회부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 간 협상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아니면 단독 날치기 하는 게 진심인지 알 수 없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의원 약 40명은 회의실 앞 복도에서 "국민의 명령이다 날치기 시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의결이 이뤄지는 동안 "앞으로 민주주의 정부라고 하지 말라"는 등 야당의 고성도 회의실 밖으로 새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최대 쟁점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갈등이 깊어지면서 '5월 법안' 처리도 당달아 애를 먹고 있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 처벌조항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부인·왜곡·비방' 중 '부인' 처벌이 너무 광범위하고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니 빼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

다른 '5월 법안'의 사정도 비슷하다. 민주당이 또 다른 당론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상규명위 기간 연장 등 강화-실촌 의원 대표발의)도 상임위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공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공법 단축),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기념재단 재정 지원 등)과 이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과 박주민의원이 7일 오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진압 중 사망 및 상이자에 대한 보훈보상 제외)도 각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가 되지 않은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문 대통령 '추-윤 갈등' 해법 정면돌파 수순

조국 거취 논란 후 1년만에 사과  
개혁 저항 밀리지 않겠다 의지 피력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갈등에 따른 정국 혼란에 '매우 죄송하다'고 일단 사과를 하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이나 윤 총장 사이에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기보다는 정계 위원회라는 법적 절차를 통한 '정면돌파' 수순을 밟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한 것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거취 논란 이후 약 1년여만에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콘크리트'로 여겨진 국정지지를 40%선이 무너지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민심 수습에 나선 것이라 분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과 진보 지지층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을 '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으로 바라보는 것과 사실상 같은 인식으로 읽힌다.

특히,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없도록 하겠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언급한데다 개혁 저항이 밀리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또 문 대통령이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한 대목도 눈에 띈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총장 정계위원회를 통한 조속한 상황 정리를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는 정계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당하게 개최돼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 '법대로' 방침을 강조함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퇴진론 등 정치적 봉합 방안은 물 건너간 것이라 반응이 나온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을 '지상과 제로' 제시한 점도 주목된다. 공수처 완성이 윤 총장 정계 논란을 넘어 여권에 '명예로운 퇴로'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 국회의원 8명 "촛불민주주의 공격...윤석열 사퇴하라"

'공수처법 개정' 촉구 긴급성명  
"지지층 이탈... 호남 지지율 하락"  
당 지도부에 검찰개혁 결단 촉구

광주지역 더불어민주당 8명의 국회의원들이 7일 '공수처법 개정 및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검찰발 논란이 지속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지역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광주시당 송갑석(서구갑)위원장을 비롯해 민형배·양향자·윤영덕·이병훈·이용민·이형석·조오섭 의원은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치검찰의 저항이 극도로 치닫고 있고 검찰을 사유화한 윤석열 사단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국가를 흔들고 있다"면서 "적폐 기록 권 세력에 편승해 집단항명을 일삼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고 광주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고 진단한 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 앞에서 민주당은 왜 검찰개혁을 주저하는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자들이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것을 왜 지켜만 보느냐"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들은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단점만 부각되고 있고 전통적인 지지층이 이탈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실제, 이날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닷새간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4.4%포인트 하락한 29.7%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호남에서 7.6%포인트,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8.8%포인트 각각 급락했다. 중도층의 경우 1.1%포인트 하락해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다. 민주당으로서 '외연 확장'보다는 '집토끼 지키기'가 발등의 불이라는 의미로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집권 후 지지도가 역대 최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간 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6.4%포인트 하락한 37.4%였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5.2%포인트 오른 57.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14.2%p), 대전·세종·충청(13.7%p), 부산·울산·경남(9.7%p) 등에서 낙폭이 컸다. 여성 지지율도 9.9%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은 핵심기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개혁 입법 부진'에서 찾는 분위기다. 정기국회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개혁입법이 완료되면 지지율도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검찰의 폭주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공수처 출범을 더는 늦출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합의의 핑계로 시간끌기를 지속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고 9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윤 총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검찰 개혁 최후의 결심'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광주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겠다. 검찰개혁에 대한 광주시민의 강한 열망을 받들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코로나19 극복! 한빛원자력본부가 함께 응원합니다!

원광경 에너지 기업 — 한국수력원자력주 — 한빛원자력본부

#### 코로나19와의 전쟁!

우리모두 예방 수칙 준수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질병관리본부 일반국민 10대 수칙

- 1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2m(최소 1m))거리 유지하기
- 2 두 팔 간격 거리가 어려우면 마스크 착용하기  
2세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경우의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 3 환기가 안 되고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 자제하기
- 4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호흡곤란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5 매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은 청소, 소독하기
- 6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
- 7 씻지 않은 손으로는 코·입 만지지 않기
- 8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 9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확인하기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37.5°C),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그 외에 소화기증상(오심·구토·설사 등), 피로, 식욕감소, 가래,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
- 10 필요하지 않는 여행 자제하기